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즈음하여..



朴 純 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그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낮은 것은 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면도 있지만 제도운영상 시행착오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야기한 면도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도입된 지 불과 15년 밖에 되지 않아 제도가 성숙되기까지는 앞으로 2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의 연금제도를 보더라도 제도성숙기에는 많은 변화를 거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선진국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제도의 개혁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연금제도를 수십 년 앞서 도입한 선진국 중 연금재정이 심각하지 않은 국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일부 선진국은 연금재정이 심각한 데도 불구하고 연금제도 개혁을 거의 포기한 국가도 있고,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는 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서구 선진국들이 연금제도가 성숙화된 시점에서 연금개혁

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연금재정의 불안은 곧 국가재정의 불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제도도입 당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저부담 고급여 방식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국내에서도 대두되어 1999년에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 당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60%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 논의

되었으나 국민들의 반발을 염려한 나머지 60%로 조정하는 수준에서 제도개선을 시행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의 문제는 국제기구의 전문가와 국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재정안정화를 위한 많은 제안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들은 그 당시에 정부정책으로 실행되지 못하다가 정부는 올해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게 되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연금제도개선안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 등은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원은 「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선정하여 노동계대표, 경영계대표, 원내 외 연금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연금제도개선안의 타협점 도출 또는 대안모색의 가능성에 대해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좌담회는 연금제도개선 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들이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해 현재 담보상태에 있는 연금제도개선안의 타협점 또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서구 선진국들이 연금제도가 성숙화된 시점에서 연금개혁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연금재정의 불안은 곧 국가재정의 불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